

다산포럼

반값등록금과 대학 자율성의 위기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학하면 비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도, 언론도, 기업도 사립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다.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대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대학답지 않은 대학들이 난립한 것이 사립대학의 비리와 질저하를 초래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6%에 불과했고, 1970년대 말에도 28%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80%를 넘어 세계 1위가 되었다. 이렇게 난립된 많은 사립대학이 이제는 등록률 50%를 넘지 못해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실 사립대학이 되고 말았다.

기고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김양복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행정학박사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와 그 후속 처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판의 핵심 내용은 배정 희망 학교를 7개씩이나 받았지만 전혀 다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687명에 이른다는 사실과 추후 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지 과정 없이 일부 학생들만 구제되었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선택권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공공재 성격의 교육을 생산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론 학교선택권 인정

여부는 나라의 역사,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군에 따른 배정을 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평준화제도를 시행한 1974년 전후의 정책이 확연히 다르다.

학교선택권은 해방 이후 시험선택 형태를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도시에서는 학교선택권이 없어지고 추천을 통한 배정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95년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이 도입되면서 ‘하향 평준화’의 비판 속에 평준화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제도가 생겨나고 평준화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고교평준화제도와 추첨배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들의 입시 부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고교평준화제도는 여러 단계의 보완

과정을 거쳐 현재 교육감이 주민의 여론을 물어 찬성하는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그렇다면 왜 주민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였을까? 그 이유는 보수·엘리트 집단의 ‘수월성(Excellence) 교육’ 주장과 진보·민중 집단의 ‘평준화 교육’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정부 주도로 일방적인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준화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고교 배정 방식도 주민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오다. 물론 광주시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쉽지 않다는 것은 공감한다. 학교의 지역적 편중 현상, 교통 여건, 학교 선호도 차이, 공사립 학교 간 성적 격차 등 교육외적 요소들의 영향으로 적확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 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 변경의 논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선 지원 후 배정’ 방식이 가져 온 우수 학생의 사립학교 쏠림 현상을 관 주도로 공사립 간에 균등하게 배정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었다고 한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다르

은 대학인증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교육부는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는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더 교수와 같이 500~600백 명의 학생들을 놓고 하는 대형 명강의는 쉽게 개설되기 어렵다.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대학들이 정부의 이런 인증평가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평가에 대한 여론이나 향후 교육당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지식사회라고 하고 대학은 지식 생산의 최첨단에 서있다. 지식 생산은 규격화된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대학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평가기준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안다면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반값등록금 때문에 정부가 대학 재정을 일부 지원하면서 대학을 더욱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지식사회의 생태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 정부의 사학 보조금 지원, 사학연금 부담금 일부 지원 등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나 최소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수학생의 사립학교 쏠림 현상은 교직원들의 회생과 헌신의 결과물이다. 배정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시킨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사립학교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학교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은 공립학교를 살리기 위해 우수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립학교를 선택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우선 학교 수용계획부터 손보아야 한다. 학령아동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학교 통합, 재배치 등으로 지역별 학교 편중 현상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기 적성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립학교 선생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 논리에 부합한다.

NGO 칼럼

활동가들에게 희망의 봄기운이 가득하길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새봄이 왔다. 겨울 동안에 얼어붙었던 땅에 따뜻한 햇살과 바람, 촉촉한 물기가 내리면 온갖 나무와 꽃들에게서 봄의 향연이 시작될 것이다. 머잖아 무등산 산정에 산새들이 만개하고, 가까운 섬진강 강가에도 봄기운이 물씬 풍겨나리라. 자세히 살펴보면 나뭇가지마다 빨강계 봄빛 물이 올라 있다. 금방이라도 툭 터져나올 듯한 기세다. 겨울 한철도 좋지만 그래도 따사로운 햇살

이 가득한 봄빛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에 더욱 반갑다. 봄이 온다고 무조건 희망이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희망이든 세상의 희망이든 누군가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싹을 틔우고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내 대신 다른 누가 희망을 만들어줄 수 없다. 각자의 삶의 무게와 진실한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우리 이웃과 세상과 자연이 내 몸과 풀이 아니고 하나임을 알고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 희망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만 희망을 건져내고자 한다.

이는 전도몽상이다. 이웃이 없으면, 세상이 없으면, 자연이 없으면 내가 단 한시도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어디 있었는가. 이웃과 세상과 자연 속에서 연기적인 성찰과 살림으로 인해 자기의 삶의 존재감이 오히려 드

러남을 자각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연을 보존하고자 애쓰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야말로 참으로 보석 같은 존재다. 제반 조건과 환경이 힘들어도 묵묵히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정진해가는 활동가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 NGO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19일 창립 이후 해마다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누기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초가 되면 각 사찰 신도들은 각자의 소구소망을 담아 쌀을 부처님 전에 올린다. 그 소중한 쌀을 사찰에서 보시받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어 오고 있다. 오는 3월 13일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제6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

가 자비의 쌀 나누기’행사를 갖는다.

오직 물질이 전부이고 물질이 진리라고 믿는 세태 속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세상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급여는 대부분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다행히 활동가 공제회를 조직하여 활동가들의 처우를 개선해가려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어 반갑기도 하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자비의 쌀 나누기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 사회를 위한 건강할 비판, 멋진 대안과 희망을 만들어내고자 애쓰고 정진해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보람, 희망의 기운이 가득히 내리쬐길 기원한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 거실에 고무매트를 깔면 어떨까

최근 광주에서도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설날을 전후하여 서울에서 살인사건 한 건과 방화사건이 있었다. 그제야 사회적으로 떠들썩해졌다. 그러나 층간소음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건설설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방치하여 다른 나라의 아파트보다 소음이 더 심하다고 한다. 거기에

다 아파트 살이 역사가 짧아 공동주택의식이 보편화하지 않아서 이웃 간의 소통의 단절과 사회적 규범의 미숙에 의한 아파트생 활문제가 심각하게 잠재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첨예한 것이 층간소음문제다.

신수동 푸드파크는 지은지 30여 년 된 낡은 아파트다. 우리 뒷집 역시 아이들이 셋인데 그들이 이사를 오고는 하루도 맘 편할 날

이 없었다. 낮이고 밤이고 간에 쿵쿵거리고 때로는 밤 12시에 쿵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깨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 인터넷으로 호소하고 만나서 설득해도 그때뿐 돌아서면 마한가지여서 설득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물색하다가 이 또한 좌절되었다.

그런데 아파트 층간소음은 주민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소음이 확산되어 들리는 것이다. 뒷집에서는 삼삼삼삼 새싹시걸음을 해도 아랫집에서는 귀를 막아야 하는 소음으로 확대된다. 약 3~5배 정도의 확산이다.

층간소음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소가 안 된다. 아이들방과 거실에 ‘합성수지그루매트’를 깔면 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두께 5cm 정도의 매트다. 아파트마다 입주자 대표 자회가 있으나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가정에는 반강제로 매트를 깔게 하면 층간소음은 시원스럽게 해결된다. 발금을 물린다거나 외국처럼 강제퇴거를 시키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기환·광주시 동구 신수동

社說

안철수 보선 출마가 호남에 주는 의미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10일경 귀국해 보선 출마 선언과 함께 자신의 정치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그의 출마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12월 미국에 도착하면서 밝혔듯이 ‘안철수 정치’를 이제 바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다시 대선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직은 그가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의 부진으로 안 전 교수가 정계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측면도 있다. 실제로 그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자신을 중심으로 야권 전체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승부수로 읽힌다.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29.4%로 민주당 11.6%에 비해 2배 이상 앞서고 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보다 안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던 호남으로서도 향후 정치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4·11 총선과 대선에서 잇달아 패배했음에도 혁신과 쇄신 없이 당권 경쟁을 돌린 ‘세력다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심이 안 전 교수 쪽으로 급격히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현실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호남 출신 인사 소외도 이에 더 무게가 실릴 개연성도 높다. 안 전 교수가 국회 진출과 세력화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주자로 우뚝 선다면 호남사람들도 박수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호남사람들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항상 바른 선택을 했ಾಗ 때문이다.

안 전 교수는 국민과 약속했던 정치 쇄신과 선진화를 이뤄내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야말로 국민적 지지와 함께 차세대 리더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대변신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단체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결집해 내는 등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에 직면해 왔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광주 YMCA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찰련, 5·18기념재단, 참여자치21 등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단체별로 총회를 열고 쇄신방안과 올 사업계획을 토대로 대책을 세우고 시민 자발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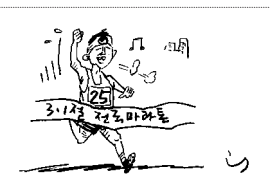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단체간 이견은 물론 지역 의제를 통합해내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해 비판을 당한 게 사실이다. 전향적인 변신을 계기로 정부와 무조건적인 대립각에서 벗어나 지역 의결을 결집·전달하고, 단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등 선진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달리기 즐거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열쇠이다. 두 다리에 보형 보조장치를 달고 생활해야 하는 아이큐 75의 어린 주인공은 괴물하는 친구들을 파하기 위해 뛰었다는 데 결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베트남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전쟁영웅도 되는 ‘삶의 기회’를 맞는다. 주인공은 오랜만에 재회한 어릴적 여

타져버리고 영혼이 빠져나갈 듯한 감속 속에서 달렸냐”라고 묘사하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올해로 48회째를 맞은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지난 1일 전국에 대 결구 대학 미식축구 선수와 되고, 베트남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전쟁영웅도 되는 ‘삶의 기회’를 맞는다. 주인공은 오랜만에 재회한 어릴적 여

마라톤 讚美



자친구가 많았이 떠나 밟는 세태 속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세상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급여는 대부분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다행히 활동가 공제회를 조직하여 활동가들의 처우를 개선해가려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어 반갑기도 하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자비의 쌀 나누기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 사회를 위한 건강할 비판, 멋진 대안과 희망을 만들어내고자 애쓰고 정진해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보람, 희망의 기운이 가득히 내리쬐길 기원한다.

최근 손에 쥘 ‘철인 3종 삼총사’라는 소설 속에서도 주인공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는 중학교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친구들과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다.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전력 질주하는 주인공에 대해 ‘폐가

인전에서 온 시작장 버리자 문득 또다시 달리기 시작해 ‘3년2개월14일16시간’동안 계속한다. 이러한 주인공의 마라톤 기행(송行)에 대해 기자들은 “왜 뛰는 거죠? 세 계평화, 노숙자, 여권신장, 환경-때문입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주인공은 “그냥 뛰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답한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4시간 15분만에 결승점을 통과한 김씨는 “뛰다 보니 까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해졌다. 자유로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새봄의 대지를 박차며 영화와 같은 ‘인간 승리’를 이룬 모든 마라토너에게 감사를 보낸다.

/송기춘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곡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2200-663 2200-621 2200-621 2200-697 2200-693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